‘승자 독식’ 아닌 함께 잘사는 시장경제

■ 이대통령 임기후반 국정기조 ‘공생 발전’

복지 확대보다 균형재정에 무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공생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공생 발전’은 ▲경제와 사회 발전이 양적인 향상만큼 질적인 제고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제 성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과실을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풀이되고 있다.

◇**함께 잘사는 시장경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생 발전’은 지난해부터 강조해왔던 ‘동반성장’과‘상생’의 가치에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적인 개념을 융합한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어느 한 종(種)이 멸종하면 전체 종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자연 생태계처럼 우리 사회의 각 경제 주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이는 새로운 철학이라기보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한 단계 더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언급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유지의 선결 조건으로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들었다.

직접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무상 보육, 무상 급식, 현실성 없는 등록금 인하 대책, 법을 무시한 저축은행 피해 보상 등이 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칠 주범으로 인식한 듯 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구하면서도 맞춤형 복지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이는 균형 재정 추구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비판으로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정공법’을 택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짧지만 뼈있는 언급을 통해 일본에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일제의 식민지 침략과 수탈이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이처럼 불행한 역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가능하려면 일본이 역사 왜곡과 같은 무형적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엄중한 충고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매우 짧게 언급됐다.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과 북핵 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교착 상태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정권교체 위해 야권 대통합”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는 야권대통합·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하고 희생하고 헌신의 자세로 통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검찰총장 ‘종북 좌익세력 전쟁 선포’ 맹비난

“공안정국 조성해 국민 협박하나”

야권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 좌익세력 전쟁 선포 발언에 대해 ‘색깔론’이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야권은 한 총장의 발언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정책 실패에 비판적인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를 사실상 협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14일 “집권 후반기 정권의 실정과 대통령의 레임덕을 공안통치로 덮고 무마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권수호의 선봉장을 자처하지 말고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색깔론을 앞세워 임기말 공안 탄압을 강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낡은 색깔론과 공권력의 폭압을 앞세운 공안통치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레임덕을 가속화해 제 무덤 파는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검찰을 정권창출의 돌격대로 만드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며 “검찰조직 개혁과 권력 핵심부의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는데 앞장서 정치검찰, 시녀검찰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한 총장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3대 전쟁 선포 대상의 하나로 종북 좌익세력을 꼽은 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경제위기 극복할 방안” 극찬

민주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비난

■ 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엇갈린 반응

‘공생발전’을 화두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긍정 평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호되게 질타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은 공생발전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인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 제시는 보수의 최고 가치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생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과잉복지’가 아닌 서민 위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매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고 부자 감세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제안한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주장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승자독식을 가속화하는 친재벌정책을 거두지 않으면서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단지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뿐이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 변화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독도 문제는 외면하고 남북관계는 무대책이며 재정파탄을 야당에 떠넘기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달렸다”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시장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공생발전을 얘기한 것은 상황인식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 “영남권 신공항 내년 총선·대선 공약 재추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영남권 신공항을 내년 총선·대선 공약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홍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방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그는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안은 있지만 정책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중진들이 호남지역구를 버리고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데 출마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며 “자기 지역구를 버리려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낫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충청권 인사 2명 인선)안을 내놓고 호남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설득이 안 됐다”며 “지난주에 이미 결심을 굳혔으며 다음주께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인학대 신고자에 포상금

김영선 의원 법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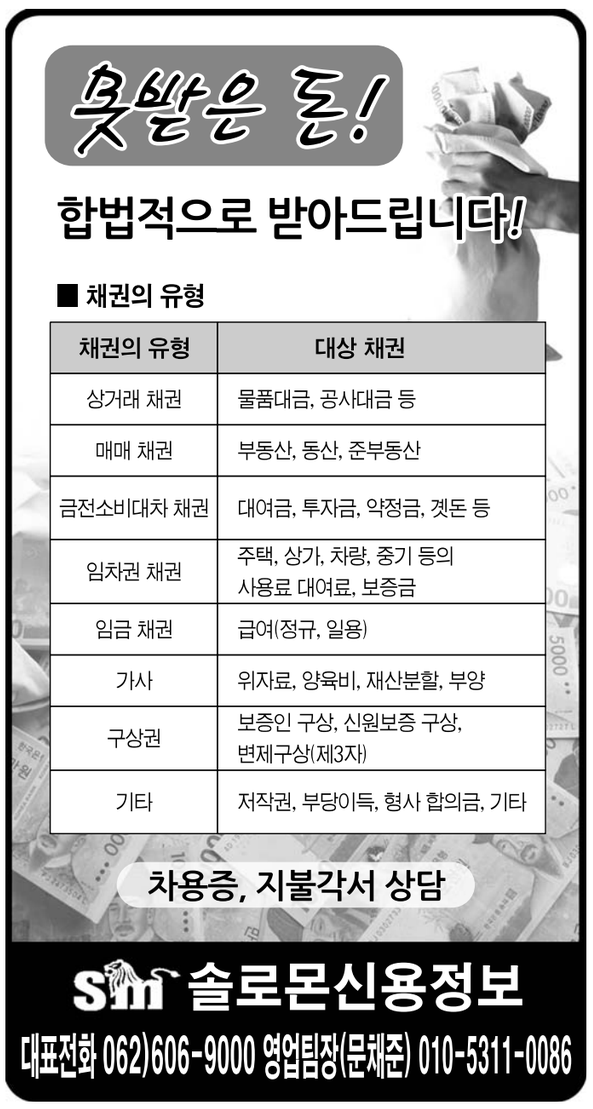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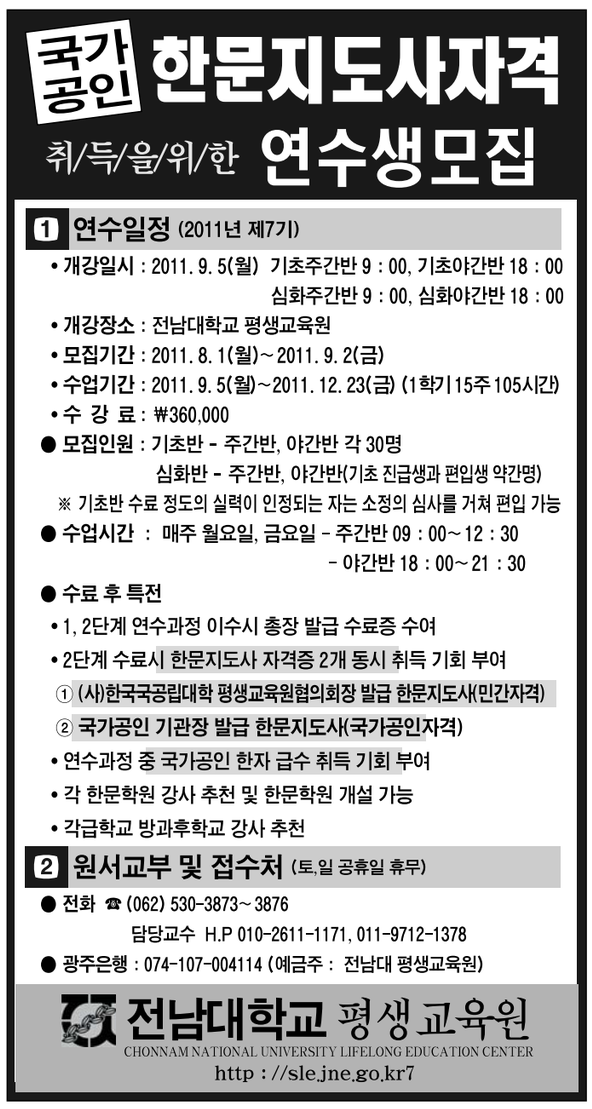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5일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노인학대 행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이외에 노인학대 신고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5·18 원인은 유언비어 때문” 적시

노태우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소송

김영진 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ˆ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을 “유언비어 때문”이라고 적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반란의 수괴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바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한 바 없다”며 “노 전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죄를 엄중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